



200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재정경제부 -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하반기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은 첫째, 거시정책면에서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경기대응기조를 유지하고 둘째,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셋째, 수출과 투자활성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시책의 효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에로 타가에 중점을 둔다.

넷째,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노력과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 노력을 병행하며 다섯째, 통상현안 등 대외경제협력 증진과 남북경협 내실화에 주력한다.

아울러, 그동안 입안되었던 정책들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 발휘될 수 있도록 주요시책을 일제 점검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를 확인·해결해 줌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하반기 주요정책 과제

1. 제한적 경기대응기조의 유지

가. 재정의 탄력적 운영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건전재정의 확보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간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1% 미만으로 관리한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당면현안에 적극 대응 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5조 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의 자금·자산·부채 관리업무를 상호 연계처리하고 재정운영의 효과와 위험요인들을 실시간 분석 및 예측한다.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3법의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며, 국가채권 및 국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

나.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적 운용 및 외환시장의 안정 유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과 해외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금융시장상황을 감안한 신축적인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장기금리 안정여건 조성 및 자금의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킨다.



주요 정책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투기적 요인 등에 의해 환율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필요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도 병행한다.

다. 물가안정 노력의 강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기업 경영합리화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하고, 농축수산물, 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사과·배의 출하계약(47천톤)을 실시하고, 가을무·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계약재배를 확대하며 국제곡물, 원자재중 가격급등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하여 정부비축자금을 활용한다.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구조개선, 물류공동화·정보화를 추진하며 소비자물가감시단 확대개편 등 물가감시 기능을 확대한다.

라.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

그동안 각 경제부처가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경제시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총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상반기에 발표한 정책들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7월중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다.

2.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상시구조개혁 체제 정착

가. 시장중심의 기업구조개혁 가속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 금융기관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 희생가능기업 : 특별약정을 통해 자금지원 등의 조치 이행
- * 정리대상기업 : 신속처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수단을 적극활용하고, 희생가능성이 없는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정리절차 폐지 및 화의 취소 등을 유도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시행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를 상시지원세제로 전환하여 기업들의 상시적 구조조정노력을 지원한다.

- * 기업의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등 4개 분야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세제지원

또한, 부실기업의 신속·효과적인 갱생 및 퇴출 등 처리를 위해 CRV, 사전제출제도 등 구조조정 수단을 적극 활용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부실위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의 무임승차행위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다.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자율감리제도(Peer Review) 등 회계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매년 선정·공표하여 부담금 경감 등 우대조치한다.

□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 추진

금년에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및 변칙적 채무보증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한다.

시스템 구축 및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한 검사 확대 등 부실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다.

나. 상시금융구조조정 체제 정착

□ 시장중심의 상시적 금융구조조정 확산 유도

2002년 하반기부터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기 경영개선 유도 및 민영화를 추진하되, 여건이 조성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조기 민영화도 병행한다.

금융지주회사를 선도금융기관으로 지원하고, 우량은행간 자율합병의 분위기를 확산한다.

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5% 이하로 감축토록 유도하고, 부실금융회사는 적기시정조치 등 상시적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은행부실채권 비율 : (99말) 13.6% → (00말) 8.9% → (01.3말) 7.6%

□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배양

은행 소유구조 개편 검토,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하며 성과지향의 인사·보수체계 정착, 위험관리시스템 개선, 금융회사의 수익기반확충 등 선진금융관행 정착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개혁을 추진한다.

투신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가치의 평가업무 등을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담당토록 유도한다.

□ 금융부실 제발방지를 위한 건전성감독의 질적 수준 제고

시장리스크 기준 BIS 자기자본규제 시행(02.1)에 대비한 금리·환율 등 시장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

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지속추진

남아있는 5개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41개 자회사중 36개 민영화·통폐합)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조직·정원관리와 방만경영 쇄신을 위해 공기업·산하기관별 자율경영혁신계획(1,906개과제)의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인사·재정·일하는 방식·지자체 개혁 등 18개 신규공공개혁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민원행정 효율화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전자상거래(G2B)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며, 국세·관세·벌칙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라. 相生의 노사협력관계 구축

□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을 병행 추진

전직 지원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연금 제도도입 등 현행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해 대승적 차원의 합의 도모

□ 개별 사업현장에 대한 참여·협력·신뢰의 노사관행 정착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성에 따라 파트너쉽 확산 지도한다.

- * 100인 이상 및 50~99인 有勞組사업장 7,168개소를 노사관계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방식을 확고히 정착

3.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가. 금융규제의 완화

그동안의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계전문가 및 금융회사, 금융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며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유도한다.

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육성

증권사가 단순 중개업무를 벗어나 자문업무, M&A 업무, 부동산 매각업무 등으로 다각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필요시 상품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등 영업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영업범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국제적 투자은행 수준의 대형선도 증권사 출현을 유도한다.

다. 자기자본경영(Equity Financing)의 활성화

주식의 직접금융시장 개선 등을 통한 발행비용 부담도 경감하는 등 발행시장 선진화 및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개선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기금 자산

운용방식의 개선, 기업연금제도 도입,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 등으로 장기안정적 주식수요기반을 마련한다.

라. 자금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추진

Primary CBO를 통한 회사채 차환발행이 원활히 되도록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별, 계열별 보증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하반기중 Primary CBO를 통한 회사채 소화여력은 최대 14조원)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장의 활성화·다양화와 함께 채권금융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조정을 원활히 마무리한다.

4. 투자·수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회복

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산은 : 6.3조원, 기은 : 2.5조원)의 소진추이를 보아가며 30억불 수준의 외자조달 등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1년 말까지 6개월 연장 등 설비투자 촉진대책을 하반기중으로 시행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하반기중 약 1,200억원, 연간 3,000억원)

나.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 신항 등 현재 시공중

인 SOC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분 민자유치방식 도입, 사업승인 기간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다. 건설투자 수요 촉진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확대하며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부동산 투자기반을 확충한다.

라. 토지이용체계의 개선

원활한 토지공급을 유도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계획-후개발」방식에 입각한 국토이용체계를 수립하고, 수요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토지행정체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한다.

마. 수출기업 애로요인 해소 및 수출시장 심화·다변화

□ 수출금융 지원확대

신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한 금융 및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신용보증 지원조건완화 및 무역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S/W, 시스템 등을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제도*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IT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 시장개척활동 강화 및 틈새시장 집중개발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상사와의 연계강화 및 세일즈외교 강화와 민·관 합동 「무역 사절단」 파견과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한다.

바. 기업경영환경에 대한 종합 현장점검 실시

기업들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7월중 경제단체와 정부(산자부 등)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8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5. 지식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IT, BT, NT, ET,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조업과 신기술간의 접목, 서비스산업의 발전등을 통해 산업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기본 인프라와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있는 전략산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참여한다.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부족한 IT분야의 전문인력 및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6.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 발전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의 추진으로 전·월세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가을 이사철에 전·월세 값 상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할 것이며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허



주요정책

용하고,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농어가 소득 안정기반 확충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과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수산업 경영안정 및 어업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 및 중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구조고도화 및 시설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건설을 활성화한다.

7. 대외경제협력 증진 및 남북경협 내실화

양자간·지역간·다자간 통상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간 고위급 회담, 실무회의 등 통상협의 채널을 확대·강화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대책 등 투자유치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효율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한다.

남북경협의 내실화를 위한 경협관련 제도적 자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민간경협 활성화 기반은 조성 하는등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한다.

III. 향후 경제전망

위와같이 하반기 경제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우리경제는 하반기중 5%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되어 연간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우리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5~6%대의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되며, 경상수지도 GDP대비 1%이상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1세기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말까지 KDI를 중심으로 「비전 2011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특히 민간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